

21세기 글로벌 지식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경|영|저|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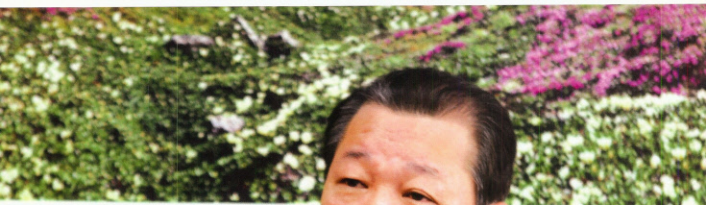
THE CRITICAL JOURNAL OF MANAGEMENT AND ECONOMY

모 든 카 피

대구 최대 증권관련 서류, 고숙복사, 칼리복사 제본,
청사진, 대형칼라출력, CAD입출력, 각종현행판
(대표 이 덕 현)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791

TEL: 053)426-8252~3 FAX: 053)426-8251



COVER STORY / 박인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정책제안 / 공기업 경영평가 공기업 혁신의 시발점이 되어야

청호평론 / 민의수렴을 통한 민생안정이 최우선이다

기획특집 / 정부 4대강 살리가 허와실

인물FOCUS / 김범일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시시논단 / 민주주의 완성, 국민 통합 '노무현이 남긴 꿈'

기업탐방 / 신재생 에너지 선도기업, 대구도시가스



Korea Economic Planning Institute

Vol.16.2009.7.1

»» Photo Essay 추억의 기차여행

아무도 찾지 않는 간이역은 한적한 풍경과 포근한 서정이 깃들어 있다.
막상 경적을 울리며 들어오는 기차에 몸을 실으면 미지를 향한 막연한 설렘으로 가슴이 뛰다.

가족과 함께라도 좋고, 연인과 친구와 함께라도 좋다. 홀로 떠나는 여행이 아닌 기차여행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한다. 한번쯤 이러한 땅만 속으로 여행을 떠라고 싶을 때, 우리는 즐거움과 그리움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기차에 몸을 싣는다.



길·조숙성 편집국장 - 사진이준혁 기차

경영저널 www.ecomanagement.co.kr

등록 제 16호 | 발행인 이진구 | 편집국장 조숙성 | 편집위원 이준혁, 윤일현, 정성민, 김석환, 김장국 | 취재팀장 우성덕 | 기자 정경태, 홍순대 | 사진기자 이준혁
서울·경기취재본부 : 031472-2061 | 울산·경남취재본부 : 052229-2261 | 창간 2007년 11월 5일 | 등록번호 경북더01230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야5길 18 1층 301호
TEL 053786-1368 | FAX 053786-1356 | E-mail chojs333@naver.com | 가격 2,500원 | 인쇄 삼영정보인쇄사



Contents

- 02_ PHOTO ESSAY / 추억의 기차여행 / 편집국
- 04_ NEWS WIDE / 편집국
- 06_ 통계로 푸는 경제 / 정성민 편집위원
- 08_ COVER STORY / 박인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 조흥성 편집국장
- 12_ 정책제안 / 공기업 경영평가 공기업 혁신의 시발점이 되어야 / 윤희영 편집위원
- 14_ 정책조명 / 첨단의료복합단지, 5조원의 황금알을 잡아라 / 편집국
- 15_ 청호평론 / 민의수렴을 통한 민생안정이 최우선이다
- 16_ 기획특집 / 정부 4대강 살리기 하와 실 / 우성덕 취재팀장
- 18_ 인물FOCUS / 김범일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 장경태 기자
- 20_ 시사논단 / 민주주의 완성, 국민 통합 노무현이 남긴 꿈 / 편집국
- 22_ 테마산책 / 니로우주센터, 우주강국 꿈을 이룬다 / 홍순태 기자
- 24_ 기업탐방 / 신재생 에너지 선도기업, 대구도시가스 / 우성덕 취재팀장
- 26_ 법령해설 / 국가법령 해석 / 편집국
- 28_ 개정법규 / 최근 개정법규 소개 / 편집국
- 30_ 리더추천릴레이 / '격돌처치'를 일깨워준 리더 / 편집국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 연 5만원 (12개월 분)
 신청 방법 : 전화 053) 766-1368
 이메일 chojs333@naver.com
 성함, 받으실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
 (기관일 경우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이름 기재)
 구독료 납입계좌 : 국민은행 608301-04-034744
 예금주 (주)에코

<독자투고 바랍니다.>

경영자본은 독자여러분의 투고물 받고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칼럼과 평론 및 현장 경험은 200자 원고지 5~7매 또는 A4지 1장(글자크기10) 분량으로 경영자본 편집국으로 보내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038-3번지
 경영자본 편집국
 이메일 chojs333@naver.com
 TEL. 053) 766-1368
 FAX. 053) 766-1356

4대강사업 보상비 2조8천억..내달부터 집행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각종 보상비로 2조 8천억원 가량이 책정돼 다음 달부터 풀릴 전망이다. 또 설계 및 시공 일괄(턴키)방식으로 발주할 공사에 대한 심의가 열리는 등 4대강 사업이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이 확정됨에 따라 2012년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보 설치사업이나 대규모 준설사업 등 공사기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이달 안으로 턴키 방식을 발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턴키로 발주할 사업을 골랐으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주 공고를 한다. 정부는 턴키 방식으로 발주할 사

업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지만, 보의 높이가 13.2m로 가장 높은 함안보와 12.0m인 칠곡보 등이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턴키가 아닌 일반 방식으로 발주할 공사 중에서도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을 조만간 발주하며, 모든 사업 발주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을 위해 편입될 토지에 대한 보상 작업도 이달부터 본격화된다. 보상 대상은 하천구역 내 토지 178km²와 댐 또는 홍수조절지 신증설로 편입될 토지 등이다. 정부는 각종 보상비로 2조 8천억원 가량을 배정해 놓고 이달부터 하천구역 내 경작지와 하천구역 내 사유지, 신규로 하천에 편입될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착수한다.

자영업자 30만명 감소..6년만에 최대 폭

자영업자 수가 6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자영업자(자영업주) 수는 579만 1천명에서 작년 5월 30만 1천명에 비해 4.9%나 줄었다. 자영업자 수가 전년도동월대비 30만명 이상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과 카드대란으로 서비스업이 크게 위축했던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자영업자 수는 또 지난 2006년 5월 이후 3년째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고용인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의 수는 더욱 급격히 줄고 있다. 지난 3년간 자영업이 부진을

보이면서 대체로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더 많이 줄어들었지만 경기침체가 극심했던 지난해 12월부터는 상황이 역전돼 고용인 없는 자영업자 수가 훨씬 많이 줄어들고 있다. 작년 12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만 4천명 감소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5만 9천명 줄었고, 올 들어서는 더 심해져 1월에는 2만 5천명(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과 8만 7천명(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5월에는 5만 5천명과 24만 5천명을 각각 기록했다.

저수지 주변도 관광단지로 개발

내년 6월부터 전망 좋은 저수지 주변에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저수지 같은 농업 생산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다양하게 활용해 농의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 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 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관광단지 개발 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주택건설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토지적성평가 등에 특례를 줬다. 또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각종 인허가를 의제처리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등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하지만, 사업 시행에 따른 이익금은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유지 및 농어촌용수 수질 개선 비용 등으로 쓰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각종 농어촌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으로 '농어촌 정비법'을 개정해 공포했다. 농어촌 정비사업은 ▲논, 밭, 저수지 등 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농가 정비, 전원마을 조성, 뉴타운 등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관광휴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포괄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지자체로 바꾼다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시도 출장소 또는 조합 형태인 경제자유구역청을 별도의 행정기능을 가진 특별지자체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및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6개 경제자유구역청 가운데 2개 광역지자체의 조합 형태인 대구경북, 황해, 부산진해, 평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지자체와 같은 법인격을 가진 특별지자체로 우선해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별지자체는 행정 구역이 아닌 대안적 성격의 자치단체로, 교통, 환경, 경제개발 등 특정 광역사무를 전담하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이와 함께 독립된 법인 자격

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지자체에 준하는 특별회계 설치 권한도 행사하게 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도로, 교통,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 등 주민의 이해가 첨예하게 엮갈리는 분야에서 행정력 낭비가 줄고, 의사결정 구조의 단축으로 투자업무 처리가 원활해질 것으로 지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지만, 상급 지자체에서 나온 공무원들이 파견 직원 형태로 근무하는데 인사권이나 재정권은 지방의회 통제를 받아 자율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

IMF "한국 2014년 균형재정 달성"

국제통화기금(IMF)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한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2014년에 재정 적자 행진이 멈출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한국 정부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 규모도 적절한 편으로 향후 추가 투입 규모는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재정 보고서'에서 한국은 작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이 1.1% 흑자였지만, 올해 경기부양책으로 -3.2%, 내년 -4.7%까지 나빠졌다가 2014년에 균형 재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 2014년에 재정 적자를 면할 것으로 보이는 G20 회원국은 사우디아

라비아(5.8%)와 한국(0%), 캐나다(0.4%)가 유일하다. 올해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 규모는 GDP 대비 -3.2%로 G20 회원국 중 브라질(-1.9%), 인도네시아(-2.5%), 남아프리카공화국(-2.9%)에 이어 재정 행진이 좋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미국(-13.6%), 인도(-10.2%), 일본(-9.9%) 등은 최악의 재정 적자에 시달릴 전망이다. 한국은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지출이 이어지면서 재정 적자가 GDP 대비 -4.7%까지 증가해 브라질(-0.8%), 사우디아라비아(-1.4%) 등에 이어 G20 회원국 가운데 중간 수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 택지개발 단계부터 자전거로 설치

대구시는 도로를 새로 만들거나 택지를 개발할 경우 도시 계획 단계부터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을 반영기로 했다. 대구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따르면 공단이나 관광단지 조성, 도로 재 정비 시에도 자전거도로와 관련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시는 또 아파트 단지와 대형 유통시설, 학교 등에 자전거 보관대 등 편의시설 설치를 권장기로 했다. 지하철 신규 건설노선이나 연장 구간에는 자전거 전용

칸이나 역사 내 자전거 이동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한다. 이와함께 각 구군과 공동으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사업인 희망근로 인력을 활용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자전거도로 관리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구지역 자전거도로는 190km를 단계적으로 늘려 320km 수준으로 늘린다. 시는 이와 관련,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계획을 수립 중이다.



2009년 하반기 산업 전망

정성민 편집위원

1. 전망의 전제 조건

(대외) 하반기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거나 글로벌 견인 축의 부재로 회복 속도가 완만할 것임을 가정 :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겠으나, 금융시장 위기와 혼란의 영향으로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반면 중국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의 영향으로 내수 경기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으로 보일 것으로 기대. 이에 따라 세계 교역은 상반기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국제금융시장에 추가적인 교란 요인이 없고,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이 원유 및 원자재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국제 원자재가의 상승세를 전제

(국내) 하반기 경제가 상반기보다 다소 개선되는 '상저하고'의 경기 패턴을 보일 것을 전제로 함 : 소비와 설비투자는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겠으나, 건설투자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소폭 회복될 것으로 예상. 수출 경기는 선진국 경제가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중국 내수 경기가 양호한 모습에 따라 상반기보다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

2. 하반기 산업 경기 흐름의 주요 특징

글로벌 경제의 미약한 회복세로 수출 산업의 불황 지속
 하반기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글로벌 견인축의 부재로 그 회복속도는 미약할 것으로 전망. 따라서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 철강 등 국내 주요 수출 산업들의 경기 부진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해운 산업도 침체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다만 수출 산업인 조선 산업은 기존 확보된 대규모 수출 물량의 영향으로 호조세가 예상. 한편 일부 내수 산업의 경우 경기 부양책의 영향으로 산업 경기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특히 건설 산업은 4대강 살리기, SOC 확충 등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공공·토목 부문 경기가 호조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글로벌 구조조정 단계 차이에 따른 산업별 경기 격차 발생
 글로벌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는 IT산업(특히 반도체 산업)이 단가 개선과 세계 수요 상승이 맞물리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빠르게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글로벌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자동차 산업은 경기 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 글로벌 구조조정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보다 산업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

국제 유가 상승의 산업별 상반된 영향력 유발

중국, 중동 등의 투자 확대로 글로벌 과잉 설비 상대인 석유화학 산업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원가 급증 요인을 판매 단가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 자동차 업종의 경우에도 연료비 상승으로 자동차 구매 동기가 하락하여, 내외수 시장 모두 수요가 급감할 우려가 존재. 그러나 산유국들의 구매력 회복으로 인한 해외 건설 수주 확대가 국내 건설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3. 주요 부문별 전망

(조선) 수주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존 수주 물량의 영향으로 선박 건조 부문은 증가세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① 상반기 현황 : 기존 확보된 수주 물량으로 건조량은 높은 증가세 지속, 그러나 세계 경제 불황으로 수주 실적은 급감
 ② 하반기 전망 : 수주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조량 증가세도 둔화되어 전반적인 업종 경기는 상반기보다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

(철강) 대내외 수요 급감으로 업종 경기 부진 지속이 예상되나, 중국의 철강 수요 확대로 침체 폭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

① 상반기 현황 :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 철강 수요 급감과 단가 하락으로 산업생산이 크게 위축
 ② 하반기 전망 : 세계 철강 수요 침체 지속과 국내 전방산업인 조선, 자동차, 기계 산업의 침체로 업종 경기 부진 예상. 다만 중국 내수 경기 부양책의 영향으로 對 중국 철강

수출 경기 회복이 예상되어 업종 경기가 소폭 반등할 가능성도 존재

(자동차) 미국 자동차 업계 구조조정의 반사 이익이 수출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본격적인 경기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보임

① 상반기 현황 :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자동차 수출이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국내 소비 위축으로 내수 판매도 급감 ② 하반기 전망 : 미국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수출 부문에 반사 이익을 기대, 그러나 전반적인 자동차 수요 부진으로 큰 폭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석유화학) 국제 유가 상승으로 정유 업종은 경기 회복이 예상되나, 나머지 석유 화학 업종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① 상반기 현황 : 중국 수출이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세계적인 수요 둔화 및 과잉 공급의 영향으로 침체 국면이 지속중 ② 하반기 전망 : 중국, 중동의 석유화학 투자 신증설로 인한 과잉 공급이 막대한 수요 회복세를 압도하면서 국내 업계의 채산성 악화가 전망 (IT) 다른 산업보다 먼저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 그러나 회복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

① 상반기 현황 : 세계 수요 급감과 글로벌 업체간 경쟁 격화로 채산성 악화가 빠르게 진행. 반도체 산업의 경우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었으나, 상반기말 D램 가격이 소폭 상승세로 전환 ② 하반기 전망 :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감소 효과로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 특히 반도체 부문은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해운) 상반기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나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하여 물동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① 상반기 현황 : 2008년 이후 세계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국내 해운 경기도 하강 국면에 진입 ② 하반기 전망 :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나 회복 속도가 미약하여 물동량이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다만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으로 벌크선 및 유조선 부문 경기의 소폭 회복 기대 (물류) 물량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단가마저 하락하여 업계 채산성이 악화될 우려가 존재

① 상반기 현황 : 국내 소비 급랭에 따른 시장 수요 위축으로 물류 산업 경기의 침체 국면이 지속 ② 하반기 전망 : 하반기 물량 감소와 단가 하락으로 업계 채산성 악화가 우려

(건설) 건축 부문 침체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문 발주 증가와 해외건설 경기 회복으로 침체 국면은 벗어날 것

로 전망

① 상반기 현황 : 주택 경기 침체로 건축 부문 경기 급감, 단 전체 건설투자는 SOC 투자 확대의 영향으로 소폭 반등 ② 하반기 전망 : 경기 활성화 및 국토 균형개발정책으로 공공부문 건설이 확대되면서 건설 수주가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특히 유가 상승으로 중동 국가들의 구매력이 부활하면서 해외 건설

4. 경기순환은 모든 경제주체에 영향 미쳐

경기가 좋을 때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활발히 움직인다. 즉, 기업은 국내의 시장에 내놓은 제품의 판매 정도에 따라 시설투자와 고용확대를 결정하게 되고, 가계 역시 소득 증가 여부에 따라 소비활동의 정도를 가늠하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와 생산·투자가 서로를 부추기며 활발하게 돌아가는 선순환 상태를 일러 '경기가 좋다'라고 한다. 반대로 경기가 나쁠 때는 소비 및 투자활동이 위축되고 팔려 나가는 상품의 양이나 속도가 줄어 들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생산활동과 투자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되고, 생산활동이 둔화되면 일자리와 일거리가 감소해 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저조한 소비가 부진한 생산, 투자·고용과 맞물려 나타나는 악순환의 경기 상태를 '경기가 나쁘다'고 한다. 즉, 경기 상승 국면에서는 생산활동이 활발해져 고용과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하강 국면에서는 생산이 활발하지 못해 고용과 소비지출이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듯 경기의 흐름은 각 경제주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가 경기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 경기에 맞는 경제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실시하지 못하고, 기업 역시 미래 수요에 대비한 적절한 생산 및 시설투자를 그르치게 돼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국민도 마찬가지로 경기의 움직임을 잘 파악해야만 소비와 저축 등의 경제행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변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의 동향을 예측하는 것은 현실의 경제 활동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기변동은 자국 내의 여러 가지 요인뿐만 아니라 나라밖의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므로 경기변동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나라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변동 폭을 완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 프로필

- 1950년생
- 경기도 용
- 서울대 경제학과 졸
- 시러큐스대 대학원 석사 졸
-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 실장
-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 국장
-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국장
-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 실장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이사장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현)

»» COVER STORY 박인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세계경제는 지식기반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지식기반경제가 곧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된 것이다. 그 중심에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출범 1주년을 앞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DGFEZ)은 11개 사업자에 대한 그랜드 청사진을 가시화하고 4개 분야별로 특성화한 투자유치 계획을 세웠다. 대구경북이 세계적인 지식기반경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DGFEZ)의 투자 유치 전략과 과제,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1. 지역의 숙원이었던 경제자유구역이 대구경북에도 들어섰습니다. 경제자유구역(FEZ)에 대해 소개해주신다면?

경제자유구역은 일정한 지역에 대해 국제표준 수준의 규제완화와 경제활동의 예외 조치를 인정해 주는 경제 특별지역을 말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정부가 지정하죠. 이미 우리나라에는 2008년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등 3개소가 지정됐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DGFEZ)은 지난해 5월 황해,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과 함께 추가 지정됐습니다. 대구시와 경북 포함, 구미, 영천, 경산시 일원 등 총 11개 지구에 면적은 39,546km²(약 1,200만평)에 이릅니다. 대구는 수성의 료지구, 동구 대구혁신도시와 국제패션디자인지구, 남구 국제문화산업지구, 달성군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와 성서5차 첨단산업지구 등 6개 지구, 경북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구미디지털산업지구, 영천첨단 부품산업지구와 하이테크파크지구, 경산학원연구지구 등 5개 지구로 지정되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총 4조 6078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2. DGFEZ는 글로벌 지식창조형경제자유구역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DGFEZ의 강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글로벌 지식창조형 DGFEZ는 지역의 풍부한 인적자원과 의료기반, 영남권 R&D 중심이라는 지역 여건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지식기반산업분야의 외국자본과



▶ 대구테크노폴리스 조감도

기술, 그리고 고급노력을 유치해 지역의 지식기반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지식경제자유구역입니다. 다시 말해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새롭게 시도되는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DGFEZ의 강점을 말씀드리자면 우수한 지정학적 위치와 배후산업 도시의 발달을 꼽을 수 있죠. 주변국가에는 4시간 비행 거리내 100만 이상 인구를 가진 도시가 51개나 있고, 포항, 울산, 구미 등 세계 최대 IT 및 자동차 산업단지 와 인접해 있습니다. 풍부한 인적자원과 안정된 노사문화도 강점입니다. 대구경북 52개대학에서는 연간 7만여 명의 고급인력배출과 전국 최초의 노사정 공동선언으로 안정된 노사문화가 정착돼 있습니다. 또, 기업을 위한 우수한 R&D 기반 시설도 좋습니다. 산학연계를 통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에 R&D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연구소와 기술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연구기관 18개, 대학부설연구소 42개, 기업체연구소 등이 이를 증명해 줍니다.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등 기업의 수도권 집중과 인구집중은 지역 인구감소로 이어져 지역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섬유 등 전통산업 구조 개편 미흡과 고급인력 유출도 갈수록 심화되고, 국제공항시설의 부족, 항만이용의 불편 등 국제적 교류에 제약이 있는 게 약점으로 꼽힙니다. 극복해 나갈아 될 부분이지요.

3. DGFEZ는 총 11개지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구개발사업추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DGFEZ는 총 11개지구로서 5개지구는 산업단지, 혁신



▶ DGFEZ 지도

도시 등 이미 추진중인 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테크노폴리스지구, 성서5차 첨단산업지구, 혁신도시지구, 국제패션디자인 지구 등은 이미 토지보상 및 부지조성이 상당히 진척돼 있죠. 올해부터는 산업용지 분양과 일부 선도시설들이 건축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6개 신규지구는 영천하이테크, 구미디지털, 포항융합기술산업, 수성의료지구 등 4개지구가 공기업(토공,수공)과 대구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 협약을 체결하고,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국제문화산업지구와 경산화원연구지구는 현재 사업시행자 선정을 활발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7.27km)는 토지 보상이 이루어진 가운데 연구시설 약 40만평에 DIGST, 국립대구과학관 등이 건축 중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생산기술연구원 분원, 경북대와 계명대 연구소가 입지를 확정했고, 지능형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뇌연구원 등은 입주 예정으로 연구시설용지는 이미 만료된 상태입니다. 내 부간선도로 등 기반시설공사도 진행 중인데 지난 4월부터 임대산업용지를 분양 중입니다. 기반조성공사와 입주가 완료되는 2012년 12월에는 연구와 산업, 주거, 문화, 레저가 어우러진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탄생을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제패션디자인지구(1.17km)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기반시설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5~8월 산업과 상업시설용지 분양을 했고, 지난 5월 국제학교 기공, 7월에는 라이프스타일센터(패션스트리트 중심상가)를 착공했습니다. 오는 9월에는 공동주택 1차 분양(652세대)을 하는 등 2011년 3월 단지조성공사 완료와 함께 아시아폴리스(Esiapolis)란 이름과 같이 동아시아의 첨단패션디자인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대구혁신도시지구(4.22km)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기반시설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5월 이전대상 공공기관(한국가스공사 등 11기관) 용지공급과 상업시설용지를 분양했고,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특히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유치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이곳에 유치되면 지구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 대구국제패션디자인지구 조감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이외에도 성서5차첨단산업지구(1.47km)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부지 절성도와 기반시설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1.67km)는 지난 4월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가 단지조성공사가 마무리되는 2011년부터 자동차부품연구원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 부품산업 위주로 입주를 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발맞추어 이곳에 '자전거산업집적화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 DGFEZ의 차별화된 투자유치전략은 무엇입니까?

DGFEZ의 특성은 기존 FEZ의 항만, 해양 중심을 벗어나 물류, 기업비즈니스 중심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DGFEZ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륙형(Inland)경제자유구역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지식기반서비스업(교육, 의료, 문화)과 지식기반제조업(첨단 IT, 부품, 융합기술 등)을 바탕으로 한 국제지식기반산업 중심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타 FEZ는 대단위 신개발이지만, DGFEZ는 기존도시의 내부와 인근 지역에 소규모의 특화된 구역을 지정하고 기능분담과 연계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네트워크형 개발방식을 채택했습니다. DGFEZ의 차별화된 유치전략은 지역의 우수한 의료,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세계일류 외국병원 및 해외명문 학교 유치, 지역 산업의 강점분야인 IT, 자동차부품, 정보통신, 섬유패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Global consulting사와 연계해 지구별 특화 컨텐츠 및 기업 선정, 실행전략 등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수립 중입니다. DGFEZ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지 장기

무상입대, 시설운영비 지원 등 해외 신진경제특구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영어 상용화, 의료, 교육, 주거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6. 투자유치 전략 수립과 투자유치기관, R&D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우선, 지난해 투자유치인프라 구축을 시작으로 올해 컨설팅개발 및 마케팅, 2010년 Anchor(핵심)시설 유치, 2011년 이후 성공모델 창출을 통한 활발한 투자유치를 연도별 목표로 정했습니다. 올해는 지구별 투자유치전략 수립, 투자유치기관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홍보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전략 수립은 DGFEZ의 투자유치 청사진으로서 수성의료지구 등 8개지구에 Deloitte컨설팅, 삼일PWC, 삼정KPMG, E&Y한영 등 국제 신인도가 있는 글로벌 컨설팅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구별 특화컨텐츠 개발과 Anchor시설 및 Target기업 선정 등을 용역 중에 있고, 용역이 완료되는 하반기부터는 용역업체와 공동으로 국내외 IR(investor relations)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 DGFEZ는 세계적 R&D 클러스터와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난해 11월 인도 구자라트주 경제개발청과 교류협력 MOU를 체결했고, 지난 3-4월까지 유럽을 방문해 독일하이델베르크 T/P,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과 교류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프랑스 소피아안티폴리스, 중국 중관촌 등과도 공동연



▶ 대구혁신도시지구 조감도



▶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조감도

구기관 설립, 정보교관, 인적교류 등을 통해 교류협력 체결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7. DGFEZ는 장기적 프로젝트입니다. 성공적인 경제특구를 위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DGFEZ는 대다수 지구의 개발 기간이 2020년까지입니다. 장래를 내다본 인내한 계획과 효과성이 큰 투자유치가 산중하게 요구되죠. 당장의 성과에만 급급하다 보면 일개 산업단지로 전략해 훗날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특구 운영에 성공한 나라들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계획하고 추진해 온 결과물 가져왔습니다. 이런 투자 유치와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외국인이 투자유치를 꺼리는 가장 큰 장애요소는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또, 도로교통 등 분야별 도시 업그레이드와 영어방송 확대, 글로벌 수준의 의식구조 개혁 등 외국인 친화적인 정주여건 조성에 더욱 많은 노력과 투자가 요구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계혜택 강화,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별법화 등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진행돼 왔지만, 앞으로는 영리 외국교육기관 허용, 개발비용의 국비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도 이뤄져야 합니다.



공기업 경영평가 공기업 혁신의 시발점이 되어야

윤일형 편집위원

기업 경영평가 문제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 개요, 경영평가 결과, 평가 결과 후속조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도자료를 통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대상은 공기업 24개, 준정부기관 76개로 총 100개의 기관이며, 기관장은 공기업 기관장 19개, 준정부기관 61개, 기타 공공기관 12개로 총 92개 기관장을 대상으로 했다. 이 경영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언론에서 왈가불가 말이 많다. “경영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이 부족하다”, “정치적인 타협에 의해서 경영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공기업 개혁 용두사미로 끝나”, “갈등이 기용 기준으로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실 이런 언론의 보도만 보면 경영평가가 잘못 된 것처럼 보여진다. 물론 이것 또한 진실인지도 모른다. 평가라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을 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공기업은 사업주체가 정부이고 정부투자자나 출연 및 출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매출규모나 재무제표 등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사기업과 비교할 때 수익성보다 공익성에 비중이 높다. 그러므로 공기업의 최고경영자가 뛰어난 경영감각과 경험 등을 가지더라도 재무상태가 취약하고 시장여건상 성과를 낼 수 없는 구조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면 가치로 평가하기에 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반대로 부채상태가 취약해도 높은 경제사회성에 독점적 지위를 지녔다면 최고경영자의 경험과 지식수준 능력 등이 부족하더라도 해당 공기업의 가치 및 성과는 높게 평가받는다는 실례로 외국 평가기관에서 세계 최고공황으로 평가 받은 인



▶ 공기업 경영혁신 워크숍

천국제공항은 이번 평가에서 1등급으로 분류되는 상위 24개사에 들어가지 못했고,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편법 임금인상과 불법 본사이전, 공공유용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난 석탄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과 한 단계 밖에 차이나지 않았다. 이처럼 평가결과의 등급이 별 차이 없는 것도 공기업 평가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경영평가의 목적은 효율성이다.

그러나 대승적인 입장에서 정부가 공기업 경영평가를 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러한 평가는 결국 우리 공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살아남고 자유경쟁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인 것이다. 필자도 지방의 공기업을 평가하면서 공기업 CEO의 강력한 반발로 경영평가가 어렵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 당시에도 그 공기업 사장은 경영평가에 대해서 평가의 결과만을 즐기게 강조했고 ‘무조건 좋은 것이 좋지 않나’는 논리로 일관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공기업 평가는 무의미하다. 지금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전문가의 판단과 문제점 분석으로 몇 년 뒤에는 그 당시 평가 결과를 뛰어넘는 결과를 도출하면서 성취감을 느껴야 한다. 되돌아보면 MBC의 광우병 보도도 원래의 목적은 미국 소고기 수입의 줄속과정에 대해서 이리저리한 부분을 저널리즘 측면에서 보도한 것이다. 결국 그 당시 이명박 정부가 대승적인 측면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더 좋은 시스템으로 보완해서 국민들에게 의혹없는 안정된 소고기 수입을 추진했다더라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을 지도 모른다. 여기에는 당연히 국민적 소통이 따라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다.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4대강 정비사업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 우리나라에 국민이 수궁할 4대강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속 시원히 설명할 전문가가 그렇게 없는가? 아니면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도 부족한가? 선장 잃은 배

처럼 풍광속에 갇혀있는 느낌이다. 한편으로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보도자료를 보고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 아직도 기능이 중복되고 민영화가 안 된 곳이 이렇게 많은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100개 기관은 물론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이니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몇 년전부터 작은 정부, 효율적인 행정을 표명했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심지어 2008년부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 등 일련의 정책마저 제대로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대목이다.

특히 평가결과 후속조치로 기관장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조치로 기관장 해임건의와 성과급 차등 지급으로 공기업을 독려하고 공공기관의 개혁 선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정도로 공기업을 평가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면 그 강도나 여파가 전례될 지 의문이다. 선진국의 경우 공공기관의 평가는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5년마다 시행되고 평가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중시하거나(영국), 관리과정의 개선을 중시하고(미국), 관리능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캐나다). 사실 공기업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공기업의 한계는 대부분의 공기업이 투자나 사업영역 금융가격 등이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개입으로 결정되어 자율성이 없고 통제되어 효율성이 민간기업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이다.

결국 조직 인사 사업시행 등 모든 것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노무현 정부시절의 건설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CEO 대부분이 참여정부시절의 장관, 국회의원, 청와대인사였다는 사실은 비전 문상을 지닌 정치인 출신들로 인해 전문성이 부족이라는 공기업 CEO의 태생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다. 뼈를 깎는 민영화와 구조조정으로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포스코나 KT의 사례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경제살리기에 국정 기조를 맞춘 이명박정부는 공기업 구조조정도 임기중의 주요한 정책인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공기업 효율성을 위한 통폐합 강력히 추진해야

사실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분업화가 시작되면서 해당목적에 의해 새로운 부처가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공기업의 증가는 효율성을 목적으로 생긴 것이다. 새로 생기는 공기업이 있으면, 없어지거나 통폐합 되는 공기업도 발생해야 하는데 세상일은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보다. 이러한 공기업 개혁이 국정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초기에 진행하던 공기업 통합이 지속적인 개혁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무부처와 해당공기업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하루빨리 공기업 경영평가의 후속조치로 강력한 공기업 통폐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 출자회사 정비 전후 모습 비교 >

	정비 전(A)	정비 후(B)	증감(B-A)
출자회사 수	273개	143개 ¹⁾	△130개 ²⁾
공기업	146	101	△45개
준정부기관	64	8	△56개
기타공공기관	63	34	△29개
출자액	58,360억원	27,183억원	△31,177억원
공기업	20,234	14,374	△5,860
준정부기관	30,356	8,012	△22,344
기타공공기관	7,790	4,797	△2,993

매각가치(추정)	45,881억원('07 순자산가치 기준)
공기업	7,728
준정부기관	26,319
기타공공기관	11,834

1) 해외투자법인 64개, 광역적 투자 6개, 모기업 효율화를 위한 분사 6개, 민자참여 입부 목적 수동 60개, 효익 등에 의한 존치 불가 3개

2) 지방매각 111개, 청산폐지 17개, 모기업 흡수 통합된 2개

<자료: 기획재정부>

▶ 출자회사 정비 전후 모습 비교



》》》 첨단의료복합단지, 5조원의 황금알을 잡아라

편집국

지난 6월 16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뛰어난 지자체들은 입지선정 제안서 제출을 마감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며 유치에 나선 15개 지자체 중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이 지난 2년여간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다. 전국 10개 지자체는 저마다 최적지임을 내세우며 뜨거운 유치 열기를 앞세워 모든 동력을 동원했다. 이르면 7월초 최종 선정 발표가 있으면 대상지에서 탈락한 지자체들은 후유증까지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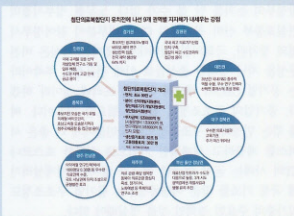


▶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절차대회

유치 열기는 뜨거웠다. 서울(마곡), 경기(광교), 인천(송도) 등 수도권 후보지들은 잘 갖춰진 의료기관과 인력, 지자체의 지원 능력, 접근성 등을 내세우며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입지선정 평가 항목에도 들어있는 국토 균형 발전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대한 우려 등은 부담으로 작용해 상대적으로 유치경쟁에서 밀렸다. 강원 원주는 의료기기 산업단지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 충남 아산은 온천 의료 관광 클러스터 등을 강점으로 꼽았다. 대전 대덕은 바이오 의학분야 특허 전국 1위, 특히 동록 세계 순위 57위라는 점을 내세워 차별화했고, 첨단의료융복합 연구개발 기반이 이미 구축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점을 내세웠다. 충북은 유일한 바이오 관련 국가산업단지인 오송 생명과학단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보건의료 국제기관, 제약 및 생명과학 관련 업체 50여 곳이 입주하는 것 등을 장점으로 부각시켰다. 대구경북은 6곳의 대학병원 등 의료연구개발기관의 강점과 파격적인 분양가(3.3㎡당 100만원)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고, 부산, 울산, 경남과 광주, 전남 등은 각각 동남권, 호남권 지역 균형 발전과 자치단체 간 공동 유치전 등을 내세우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란

첨단복합의료단지는 정부가 오는 2008년까지 총 사업비 5.3조 6천억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100만㎡의 부지에는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 개발 지원 센터, 첨단 임상실험센터 등 의료 연구개발 핵심 단지가 들어선다. 82조원의 생산 증가와 38만여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자리잡는 셈이다. 이 같은 파급효과 때문에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은 치열한 유치전을 직간접적으로 펼쳐왔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미래 국가 성장동력의 핵심단지로 성장하게 된다. 이 단지에 입주하는 국내의 기업들은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 제공은 물론 신약 및 각종 의료기기 품목 허가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각종 제도적 지원도 받게 된다. 단지 내 기업연구소 이외에도 대학 및 의과학 연구소를 입주해 R&D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실험 연구를 담당할 메디컬 센터, 연구와 임상실험, 치료를 병행할 의과기관도 설립된다. 입주 기업과 기업인, 직원에게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글로벌 의과학 연구소들이 집결하는 세계적인 의과학단지로 집중 육성된다. 이와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건강검진, 질병치료와 관광민화를 결합해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메디컬 투어 코스로도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단지 내에는 마케팅을 담당할 코디네이터 등 30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해 2012년까지 전세제 10만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 각 지자체가 내세우는 점



민의를 수렴을 통한 민생안정이 최우선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큰 혼란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밖으로는 북핵 위협과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둘러싼 냉기류가 흐르고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 또 안으로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촉발한 국론분열과 정쟁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심을 수용한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국정쇄신이다.

민의를 수렴은 철칙이다

국정쇄신에 대한 민심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더 높다. 그럼에도 민심을 대변해 법안과 국사를 논의해야 할 지금의 국회는 참으로 골몰전이다. '이전투구' 식 정쟁과 조건부식 동원은 도대체 무얼 의미하는가! 정녕 민의는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 민의 수렴은 정당의 기본 기능이며 철칙이다. 여야 할 것 없이 민의를 겸허히 수용해 모범적인 혁신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도리다. 그렇다고 국민전환위원회에서 정책현안들을 시급히 추진한다면 자칫 극심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밀어붙이기식 강행처리는 정쟁을 부채질할 뿐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과 이견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무엇이 근원적 처방인지부터 바로 봐야 한다. 민의를 대변해 대화와 타협으로 더 나은 정책을 수행해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치다. 정치가 제 현실을 못한다면 갈등과 이견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소동을 위해서라도 민의에 귀 기울이는 자세는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경제위기 후속대책 마련되어야

세계 경제는 여전히 표류하며 짙은 안개 속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도 선부른 낙관이나 지나친 비판은 자칫 정책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연한 대처와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그만큼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한 시의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이야기다. 상반기 경제실적은 정부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을 엄청나게 쏟아 부은 결과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반기 들어 재정투입의 약효가 떨어지면 경제상황은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운용방안에서 밝힌 대로 경제위기 이후 대비한 준비작업을 차근차근 진행시켜야 한다.

지금처럼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기초가 중장기적으로 나라살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공격적인 재정지출과 통화공급 확대조치를 마무리할 후속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서민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서민을 보호하는 정책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어려운 시기에 서민경제를 살리지 않고서는 어떠한 정책도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한다. 경제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대상은 서민층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하반기 경제운용의 초점을 서민경제에 맞춘 정책 기본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경제가 회복세라도 서민들의 생활환경이 나아졌다고 피부로 와 닿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정부는 서민들이 피부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대규모 현상 중심정책을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 또한 민생을 챙겨주는 각종 민생밀착형 정책들이 정책 나열에 그치지 않고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본다.





정부 '4대강 살리기' 허와 실

우성덕 취재팀장

정부,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수립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8일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지난 4월 4대강 인근 12개 시도 대상 지역설명회와 전문가 자문, 관련학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 것이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은 본사업비 16조 9000억원과 직접연계사업비 5조 3000억원을 포함, 22조 2000억원 이상이 투입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본사업비와 직접연계사업비만 제시한 것으로 각 정부부처

초의 536.1km 규모로 줄었다. 이와 함께 직접연계사업에는 국토부의 생태하천(392km), 제방 보강(243km), 자전거길(522km)과 농식품부의 농업용 저수지(9개), 환경부의 수질개선 등이 주된 내용이다. 문화, 관광 등 강살리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도 부처별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물 관리 선진국 vs 물 관리 후진국

정부는 이같은 4대강 유역의 수해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 1조 5000억원과 복구비 2조 4000억원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질개선, 물 확보, 문화관광 활성화 등의 간접 편익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홍수, 가뭄 방지와 수질 문제 해결 등 기후 변화로 인한 물 위기에 대비할 수 있고, 수자원 기술발전과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해 세계적인 '물 관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는 이러한 마스터 플랜의 수립 절차와 사업비 등을 통해 수질이 되레 악화된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존재하는 데도 1개 프로젝트인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계획보다 용수 확보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사업비가 당초 정부 발표보다 대폭 증액됐고, 연계사업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예산 규모를 밝혔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추가로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될지도 미지수다. 한반도 대운하 중 경부운하 사업비가 14조 원인데, 한강과 낙동강 정비사업의 본사업비가 12조 원이라는 점도 이번 마스터플랜에서 운하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환경단체와 학계에서는 여전히 대운하 전단계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보 설치 및 준설과 관련한 수질 오염도 개선은 커녕 악화될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브리핑 장면

가 사업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한 연계사업비가 빠져있어 사업비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본사업의 경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5억 7000㎡ 규모의 하천을 준설하고 16개의 보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생태하천을 537km 조성하고, 제방 377km를 보강하는 한편, 5개의 댐과 홍수조절지를 설치하고 1,206km의 자전거길을 조성키로 했다. 이 가운데 하천 준설 규모는 지난해 12월 당시의 2억 2000만㎡보다 배 이상 늘어났고, 보의 개수도 당초 4곳에서 4배 가량 많아졌다. 이로 인해 한반도 대운하 계획과 비슷한 규모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반면, 생태하천 규모는 당초의 760.2km를 축소했고, 제방 보강도 당

대운하 아니다 VS 대운하 전 단계다

정부는 대운하 논란과 관련해 준설과 16개 보를 통

한 수심 확보는 저수공간이 목적이지만 화물선 운행을 위한 주운수심 확보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 근거로 정부는 대운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갑문과 터미널을 설치해야 하지만 마스터 플랜에는 관련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꼽았다. 또 화물선이 운행하기 위해서는 보의 높이를 20m 이상 높여야 하지만, 이번에 설치되는 보는 5~10m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학계에서는 오히려 이번 발표로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 전단계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는 입장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정부가 최초 발표시 4개의 보를 설치하겠다고 했다가 16개의 가동보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최종 발표했다"며 "가동보는 갑문이 없어도 설계만 변경하면 운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질 개선 VS 수질 악화

정부는 보 설치시 수질 오염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대해 보를 막는다고 반드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갈수기에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인(TP)만 잡아주면 된다"며 "우리가 1년 넘게 화학처리방법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본 결과 인을 94%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준설로 인한 수질 오염에 대해서도 부유토사 등 수질 오염을 미리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히 방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와 학자들은 4대강 모두에 보를 설치하는 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2009년 하천환경포럼'에 참가한 학자들은 금강의 경우 종단방향 생태계를 위해서는 보처럼 하천 흐름을 차단하는 시설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강도 보 설치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곳은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한 후 설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설에 대해서도 골재 채취량이 5.7억㎥로 늘어나고 2012년까지 4대강에 한꺼번에 준설과 보 설치를 끝낸다는 계획이어서 사업 기간 내내 4대강이 흙탕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원조달 문제없어 VS 재원조달 불투명

막대한 재원 조달도 쉽지 않다. 정부는 국비 이외에 공기업과 민간채권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수의 보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민간이 투자에 나

설지는 의문이다. 민간이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오는 2011년 사업 완료는 물건너간다. 만약 정부가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인센티브 등을 줄 경우 특혜시비에 휘말릴 소지도 크다. 정부는 아직까지 민간 등의 투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지 않다. 또 하천정비 배후지역과 연계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바람이 재연될 우려도 있다.

다양한 의견 수렴했다 VS 졸속추진이다

2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을 정부가 6개월만에 확정 지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정부는 지역설명회를 비롯해 전문가그룹 자문, 관련학회 토론,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한 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각계에서는 정부가 수질개선을 4대강 살리기의 포장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마스터플랜에는 수질개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토목공사를 통해 표심을 얻겠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있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통한 고용창출 34만여명과 4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자체 용역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한국은행 자료로 대체한 것도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분이다.

4대강 살리기 주요내용



▶ 4대강 살리기 주요 내용



》》인물포커스 김범일 대구시장 / 김관용 경북도지사

7월 1일로 김범일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민선4기 취임 3주년을 맞았다. 이번 호에서는 남은 임기 1년간 지역 현안 해결과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한 이들의 포부와 각오를 각각 들어봤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글로벌 금융 위기 등으로 인한 어려운 지역여건 속에서 대구경북을 이끌어 가는 이들의 후반기 목표는 무엇일까?

글 / 장경태 기자

김범일 대구시장

김범일 대구시장은 임기 후반부의 화두로 '희망'과 '계도약'을 내걸었다. 김 시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3년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신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해 왔다"며 "이제 이런 신성장동력을 발판삼아 희망과 계도약으로 대구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시장은 최근 대구를 지식기반시대 선도 도시로 이끌어갈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한 점을 내세웠다. 그는 "실제 장기간 표류하던 각종 지역현안 해결이 서서히 가시화 되고 있다"며 "대구가 지식기반시대 선도 도시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김 시장은 그동안의 성과로 ▲국가과학산업단지 건설 추진 등 산업융지 확보 ▲영남권 상공항 건설 추진 ▲경제자유구역 지정 ▲낙동강 살리기의 지역 프로젝트 반영 등을 꼽았다. 또,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스타기업을 육성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 동성로 리모델링 등 도시공간의 재창조, 대구공군기지, 취수원 이전 등 지역 숙원사업 해소도 성과로 들었다.

그는 "이런 성과는 대구의 미래를 가능케할 수 있는 희망이다"며 "이처럼 다이나믹한 불씨를 지역 발전을 위한 계도약의 화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최근 영남권 상공항 입지 논란과 관련 "영남권 상공항은 부산 뿐만 아니라 대구, 울산 등 5개 시도가 공동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산

이 가덕도를 지나치게 내세울 경우 4개 시도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시장은 이날 남은 1년의 임기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남은 임기 동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국가과학산업단지 착공 등 대구 경제 살리기의 가시적인 성과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구의 경쟁력과 대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한 기본여건을 갖추는 데 노력해 왔지만 남은 1년은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행사와 도시 브랜드 상승,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다. 이는 지역 발전을 위해 근본적으로 중요하고도 실현 가능한 사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임기 내에 새로운 사업 추진보다는 기존 사업을 매듭하는 쪽으로 시장 방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김 시장은 임기 3년 중 아쉬웠던 점도 언급했다. 그는 "대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취임 후 2년간 노력했지만 지난해 촛불 정국으로 어수선했고 하반기에 경제 위기가 오면서 1년 간은 성과를 못냈다"며 영세기업과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개선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지만 세계적 경기침체로 시민들의 체감 경기 회복세가 둔화돼 어렵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다"며 "대기업 유치 부진으로 지역경제 소생을 지연시킨 점도 있는 아쉽다"고 털어놨다. 그는 남은 1년간 대구의 슬로건인 '희망의 도시, 일류대구' 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내년 대구시장 재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재출마 하더라도 지금 에너지를 선거 쪽으로 낭비할 여유가 없다"며 "원래 저는 행정 출신으로 앞으로도 일하는 데 90%의 힘을 쏟고 정치는 10%만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임기 후반부의 화두로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다. 김 지사는 지난해 24일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남은 1년 동안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그 어떤 복지정책보다 앞선 최고의 복지로 생각한다"며 "저탄소녹색성장과 투자유치활성화 등을 통해 신규일자리를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열정과 독심력으로 도정을 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청이전지 확정과 투자유치 확대가 제일 보람있는 일"이라며 "투자유치 확대와 국가예산의 획기적인 증액 확보

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얻은 큰 성과로 생각한다"고 자랑했다. 경북도는 지난 3년간 10조 2000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김 지사는 "도지사 관사에 대외통상교류관을 설치하고, 코트라 등 대외무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했다"며 "투자유치를 위한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세계 어디든지 달려갔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저탄소녹색성장 시대에 맞춰 지난해 8월 '월드그린 에너지 포럼'을 열고 11월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올 4월 그린스타트 실천다짐대회와 온실가스 줄이기 100만명 서명운동을 돌입하는 등 그 어느 지역보다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그는 특히, 최근 동해안과 낙동강, 백두대간을 성장축으로 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북도의 녹색개발정책과 유교, 신라, 가야의 3대 문화권을 바탕으로 한 전통문화 관광산업화는 정부의 정책에 잇따라 반영됐다"며 "경북이 타 시도보다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300만 도민의 숙원이었던 도청 이전지 확정,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사업을 UN과 함께 추진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20%대에 불과해 중앙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쉬움으로 드러났다.

김 지사는 이날 남은 1년의 임기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경북은 녹색성장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며 "산과 바다, 강 등 천혜의 자연자원과 풍부한 문화자원, 첨단산업과 R&D의 장점을 살려 '산업의 녹색화'와 '의식의 녹색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풍력,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새마을운동과 전통문화 복원을 통한 '의식의 녹색화'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담아냈다. 김 지사는 "국내외적 어려운 여건 속 기대 이상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현정위주의 행정체제 구축과 함께 정치, 경제, 언론, 시민단체 등 300만 전 도민이 함께 맘 졸인 결과로 더욱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임기 동안 대구시를 비롯해 자치단체 간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상생발전의 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의식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김 지사는 "이처럼 국내외적 어려운 여건 속 이런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300만 전 도민이 함께 맘 졸인 결과"라며 "남은 1년간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청 제1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 민주주의 완성, 국민 통합 '노무현이 남긴 꿈'

편집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우리 곁을 떠났다. 7 일간의 국민장에는 무려 500만명의 추모인파가 그의 서거를 애도해 하며 대한민국을 슬픔으로 물들였다. 그가 떠나면서 남긴 정신과 가치는 다시 우리 안에서 부활했고, 그가 갈구하던 희망도 우리 몫으로 남겨졌다. 한 평생을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권위주의와 맞서고, '균형 발전'과 '지역주의 타파'를 기치로 내걸었던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우리 몫이 됐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란 어릴 적 출발점부터 대통령 퇴임 후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그의 신념은 우리의 과제로 남았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인권, 민주주의, 사회적 약자의 보호

노 전 대통령이 평생 고민한 화두는 '민주주의'였다. 퇴임 후 만든 인터넷 사이트 '사람 사는 세상'은 국민 소통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그 고민을 모색하던 공간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민주주의든 진보든 국민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만큼만 가는 것' 같다.

결국 세상을 바꾸자면 국민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진보의 미래'를 모색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퇴임 후 그가 믿었던 인권과 탈권위주의의 회귀,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우향우' 현상에 대한 고민이 배경이다. 인권, 민주주의,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민주화 시대의 가치가 여전히 미완으로 남겨진 탓이다. 국민에게 돌려주려던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독립성은 다시 흔들리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한 가치도 부정 당하는 역사적 후퇴에 대한 비판이다.

하지만 이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그가 항상 '새 시대의 만행'이고 싶었던 것처럼 '대결과 대립의 민주주의'가 아닌 대화와 타협의 '협치 민주주의'였다. 그는 '민주주의는 내 뜻을 관철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 맘대로 못하는 걸 배우는 것, 내 마음에 다 들지 않지만, 그러나 일부 진정했다는 걸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균형 발전, 국민 통합

그가 재임 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과업은 정치개혁과 함께 국민통합이었다. 이는 네 차레나 낙선하면서도 끊임없이 부산에서 영호남 지역주의에 도전한 것처럼 '지역주의 타파'와 이를 위한 '균형 발전'으로 표출됐다. 주류로서의 정치인생을 포기한 채 비주류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계기

가 됐다. '박보 노무현', '노짱'이란 열혈팬들도 이때 등장했다. 또 '외국인정책기본법' 제정 등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진보라며 지역과 계층, 성별, 세대, 인종을 넘어선 통합과 공존에 대한 바람도 드러났다.



▶ 대구경북지역 대학교수 시국선언 기자회견

민주주의 위기 극복의 계기

그의 서거를 민주화의 큰 틀을 바라보게 했다. 우리나라 민주화라는 거대한 흐름이 가장 깨끗한 대통령이란 이미지가 부패 의혹으로 희석 될 소지가 많았지만 결국 그의 서거로 민주주의 성장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그가 남긴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라는 유서 또한 민주화라는 큰 틀의 흐름을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가 남긴 숙제는 여기서 비롯된다. 가장 큰 과제는 정쟁의 종말이다. 권력의 최고 정점에서 권력을 놓는 순간, 자살이라는 죽음을 선택해야 했던 '권력 무상'을 우리 모두는 경험했다. 이 때문에 더욱 정치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극단적인 대결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런 우리 정치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것을 그의 서거가 역설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한국 정치사회의 야만성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도 크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비난의 정치와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은 정치에 대한 비판이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배제주의 정치를 다시 상생과 공존의 정치로 복원시켜야 하는 것도 과제다. 그가 온 몸을 바쳐 던진 메시지는 '화해와 상생' 공존이었다.

정치자금 · 권력기관 문제점 짚어

그의 서거를 계기로 분열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들 공감하지만, 방법은 조금씩 다르다.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 즉 정치자금에 대한 문제다. 누구보다 깨끗한 대통령임을 자임했던 그도 정치자금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지금과 같은 정치 구도 속에서 정치인은 잠재적 범법자로 치부되기 일쑤다. 범법자가 되느냐는 선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선거판은 정치축제가 아니라 목숨을 거는 전쟁처럼 살벌하고, 승자독식문화로 변질됐다. 결국 돈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정치자금의 현실화, 투명화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치학자들은 정치자금법이 규제 일변도이기 때문에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자금법을 완화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의 서거를 계기로 청와대와 권력기관 등의 포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게 검찰과 국정원, 경찰의 핵심을 국민적인 인사로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은 물론 청와대 내 민정시스템에 중립적인 인사를 배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정기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탓에 검·경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색깔은 항상 논란이 돼 왔고, 정치보복이란 비판도 받아온 것이다.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역시 개선돼야 될 과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리 의혹에 대해 언론은 피의 사실임으로도 개인한테 모독을 주는 방향으로 보도를 해 왔고, 검찰은 또 그걸 이용했다. 이는 그가 참여정부 내내 검찰과 언론 개혁을 외치며 관심을 쏟았던 점을 되새겨 보면 검찰과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과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5월 29일 서울 경복궁 홍례문 앞에서 거행된 그의 영결식과 노예에는 시민 60만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그의 서거를 애도했다. 7일간의 국민장에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500만명의 추모행렬이 연일 계속됐다. 그가 던진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가 생생하게 살아 있음을 의미한다. 그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이미 많은 업적과 동시에 많은 과제를 남겼다.



》》 나로우주센터, 우주강국 꿈을 이룬다

장경태 기자

나로우주센터 위용 드러내

우주강국 '코리아'를 향한 꿈이 접화됐다. 지난 6월 11일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외나로도에서는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발전 기지인 나로우주센터가 역사적인 준공식을 가졌다. 이곳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KSLV-1)호'도 이달 30일을 목표일로 발사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세계 13번째 우주발사체 발사장 보유국가가 됐다. 나로호가 과학기술위성 2호를 싣고 성공적으



▶ 나로우주센터 조감도

로 발사되면 우리는 세계에서 자력으로 자국에서 위성을 발사하는 10번째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 국가가 된다. 총 507만㎡(약 153만평)의 부지에 들어선 나로우주센터는 2000년 12월 공사를 시작한 이래 준공 때까지 3200억원이 투자됐다. 이곳에는 발사대와 발사통제동, 종합조립동, 기상관측소, 추적레이더, 광학추적장치 등 첨단시설을 갖추고 있다. 센터에서는 내달 말 나로호 발사에 이어 내년 4월 나로호 2차 발사가 예정돼 있다. 정부는 나로호의 뒤를 이을 후속 발사체(KSLV-II)를 2018년까지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다. 2단형인 나로호의 1단 액체 로켓은 러시아에서 도입했지만, KSLV-II는 1.2단 로켓 모두 우리 힘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2020년까지 달 탐사 궤도선을, 2025년까지 달 탐사 착륙선을 개발하는 등 우주탐사 프로그램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독자 기술, 우주 강국 반열에

나로우주센터 건설의 80%는 순수 국내 기술로 이뤄졌다. 하지만 우주를 향한 우리나라의 도전은 시련의 연속이었다. 미국으로부터 발사추적, 계측, 통제 장비를 도입하기로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미국 무부가 도입 직전 국가 전략산업이란 이유로 수출을 불허했다. 이에 항공우주연구원은 기술 도입을 급하게 바꿔 비행종단시스템은 이스라엘, 원격자료 수신장비와 광학 추적장비는 프랑스로부터 분산 도입해 위기는 넘기는 등 우여곡절도 많았다. 발사대 기술을 지원하기로 한 러시아도 기술보안 논란 때문에 발사대 설계도를 계획보다 한참 늦은 2007년 3월에서야 보내왔다. 2008년 하반기까지 완성하기로 한 일정을 맞추기가 불가능해 보였다. 이처럼 '불가능한 일정'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들은 A3 용지 2만 1631쪽에 이르는 방대한 설계도를 밤을 새워가며 일일이 국내 부품 규격에 맞도록 수정했다.

기술제공 러시아도 놀란 힘

우리 기업들의 저력도 빛났다. 발사대 제작을 맡은 현대중공업은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에서 축적한 기술을 응용, 초당 900L의 물을 살포해 발사체가 내뿜는 엄청난 화염을 식히는 시스템을 독자 개발했다. 지하에 있는 전선들이 썩어 수백 도의 화염에도 견딜 수 있는 차폐벽도 개발에 성공했다. SK C&C는 공간 문제로 발사대와 제어실이 다른 곳에 세워지자 수백 도의 고온에도 문제없는 통신 기술로 두 시설을 연결했다. 이를 지켜 본 러시아 전문가들은 '발사장을 처음 건설하는 나라가 여러 기업들이 각 부분을 나눠 건설하도록 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극찬했다. 연구원들의 노력과 기업들의 기술력에 힘입어 설계도를 받은 지 19개월 만인 2008년 10월 발사대는 완공됐다. 올 3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4배나 많은 성능시험도 모두 성공적으로 마쳤다. 러시아측은 '한국이 계획하는 일정은 절대 불가



▶ 나로우주센터 KSLV-1발사대

타까지 합하면 나로호 발사에 8,200억원이 넘게 투자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주산업은 투자대비 효과가 상상을 불허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까지 표현한다. 우주탐사에서 비롯된 위성항법시스템(GPS)이 선박, 승용차, 휴대전화로까지 이어진데 보듯 우주선과 우주인을 위해 개발된 기술은 신상품 개발로 이어진다. 널리 알려진 선글라스와 브레지어의 형상기억합금, 자기공명영상(MRI)도 우주기술에서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미국의 새로운 상품은 세계 최대의 발명가 집단인 미 항공우주국(NASA)에서 나온다'는 말을 할 정도다. 나로호 역시 3조원에 육박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세계 13번째 발사장 보유

나로우주센터는 첨단기술이 집합된 시설물들의 전시장이다. 어떠한 오차와 실수도 허락되지 않는 우주항공 기술의 특성상 각종 시설물에는 최첨단 기술이 이중, 삼중으로 설비돼 있다. 나로우주센터는 크게 발사체를 깨끗하게 세워 하늘로 올리는 발사대와 발사 후 궤적을 추적하는 추적레이더동, 발사 임무를 총괄하는 발사통제동으로 이뤄져 있다.

3000도 고온에도 끄떡없는 발사대

발사대는 나로호를 90도로 떠받치고 있다가 발사 직전 놓아 주는 역할을 한다. 무게 140톤, 길이 33m에 이른다. 나로호는 발사대에 부착된 케이블을 통해 연료가 주입된다. 섭씨 영하 200도의 극저온을 견디는 연료 장비와 발사 당시 섭씨 3000도에 달하는 초고온의 화염을 동시에 공존 시켜야 하는

능하다'며, '우주 발사장에 세울 발사대 건설에 우리와 함께 참여하자'는 제의까지 했다.

수조원의 경제 파급 효과 예상

나로호 개발에는 5,025억원이 투입됐다. 나로우주센

트가 발사대다. 이를 위해 나로호의 각종 장치와 통제 센터를 연결하는 제반 IT시설물을 철관과 콘크리트로 보호해 지하에 구축했다.

추적과 교신이 동시에 가능한 추적레이더동

추적레이더동은 발사 이후 나로호가 예정된 궤적으로 순항하는지 관측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레이더와 구별되는 점은 위치 추적을 하면서 동시에 교신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상에서 쏜 레이더를 나로호에 부착된 장치가 정확히 수신한 후 이를 다시 지상 기지국으로 보내 나로호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 준다. 발사직후 55초 만에 음속(音速)을 돌파하는 나로호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이중으로 추적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에 별도의 추적레이더 장치를 설치했다.

총괄 지휘하는 발사통제동

발사를 위한 연료 주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여부와 발사 당시 각종 장비의 운용, 그리고 나로호가 안전하게 비행하는지 총괄 지휘하는 곳은 발사통제동이다. 발사통제동에는 발사임무를 총괄 지휘하는 발사지휘센터, 나로호에 연료 공급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등을 판단하는 발사체통제센터(LCC)가 입주해 있다. 발사통제동의 비행안전통제센터(FSC)는 나로호의 사고를 대비해 운영된다.



▶ 나로우주센터 준공식



▶ 나로(KSLV-1)호



» 신재생 에너지 선도기업, 대구도시가스

글 / 우성덕 취재팀장 · 사진 / 대구도시가스 제공

대구도시가스는 한국 에너지 산업을 이끌어온 대성그룹의 핵심 주력 계열사다. 1983년 1월 회사를 설립해 1984년 10월 내당 삼익APT 도시가스공급을 시작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2008년 말 현재 대구시와 경산시 전역, 칠곡군, 고령군 등 약 72만여 수요에(가정용, 업무용, 산업용포함) 약 9억 1400만㎡의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고객 안전, 친환경 경영 최우선

대구도시가스는 고객 안전을 최우선 경영으로 하고 있다.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전위원격감지시스템, AVL시스템과 같은 정보화시스템을 갖추고, 배관망 해석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는 등 통합안전시스템을 구축, 안전관리와 안정 공급에 노력을 하고 있다. 또 기존 도시가스 인프라를 이용한 NGV(Natural Gas Vehicle)사업, 소형 열병합(Co-gen), 가스용융기기(GHP: Gas Heat Pump 및 가스엔지 등)도입 및 설치 등 판매량 증대를 위한 다양한 수요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친화사업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매립가스(LFG, Landfill Gas) 자원화 사업, 구역형집단에너지 사업(CES: Community Energy Supply System)을 통해 자원재활용 및 도심의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는 등 환경경영을 선도하고 있다. 2002년에는 대성청정에너지연구소(DICE, Daesung Institute for Clean Energy)를 설립, 풍력과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 무공해 대체에너지의 연구개발로 대성그룹의 성장동력 발굴은 물론 천연가스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녹색에너지 기업으로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대성그룹,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

한국 신재생에너지의 실험장인 몽골. 에너지 부족국인 몽골은 강한 바람과 햇빛이 풍부해 선진국들의 신재생에너지의 실험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 중심에 대성그룹이 있다. 2005년 대성그룹 연구진이 몽골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한 이래, 올해부터 태양광-풍력 복합 발전 시스템을 통해 사막화를 방지하고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 테

마파크가 조성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시장성에 있어서도 중앙아시아, 동남아, 남아, 아프리카 등 후진국을 중심으로 막대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대성그룹은 지난달 10일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솔루션인 태양광-풍력 복합발전 시설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돌입했다. 태양광-풍력 복합발전시스템은 몽골이 낮에는 태양광이 풍부하고, 밤에는 강한 바람이 부는 잇점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독자적인 신재생에너지 솔루션 사업으로 2003년 한몽국책사업으로 시작됐다. 이는 대성청정에너지연구소(DICE)가 현지 실증을 통해 몽골 환경에 적합한 태양광-풍력 복합발전시스템 개발에 성공했고, 전기가 없던 몽골 외곽 '나란'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데 성공하면서 2007년 전세계 최초의 사막화 방지 신재생에너지 모델인 몽골 GEEP(Green Eco Energy Park) 프로젝트로 확대됐다.

몽골 GEEP(Green Eco Energy Park) 프로젝트



▶몽골 GEEP 프로젝트 사막화방지시설

몽골 GEEP 프로젝트는 사막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프로젝트다.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 시 일대 330만㎡ 규모 부지에 몽골의 풍부한 바람과 햇볕을

활용하는 태양광-풍력 복합발전시스템을 구축했다. 전력을 공급하고 지하수를 끌어올려 녹지를 조성해 사막화에 대응하는 대형 사업이다. 몽골 GEEP 프로젝트는 지난달 10일 준공식과 함께 사막화 방지시설 가동이 본격 시작됐다. 한몽 국제연구과제로 시작한 몽골 GEEP 프로젝트는 지식경제부와 한국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으로 2007년부터 총 27억원이 투자됐다. GEEP을 통해 생산한 전력은 지하수를 끌어올려 녹지조성을 위한 조립수와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용수로 활용되며, 몽골 전역에서 진행되는 사막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GEEP을 대표적인 사막화 방지 신재생에너지 모델로 상품화해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독립형 전원공급과 수자원공급 모델로 수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대성그룹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국제지원사업' 사업자로 선정돼 몽골 수도 동남쪽 500km 지점에 위치한

만다흐(Mandakh) 마을에 전력공급과 사막화방지를 목적으로 태양광-풍력 복합발전 시스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 위생해빙장 대립가스 포집정제시설

대구도시가스, 국내 최초 타워형 태양열 발전소 건설

대구도시가스는 지난해 12월 지식경제부로부터 '200kW급 타워형 태양열 발전시스템 개발 사업'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됐다. 지식경제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3년간 총 116억원(정부출연금 71억5천만원, 민간부담금 45억원)이 투입될 이 사업은 최소 2만 3100㎡ 부지 위에 60m 높이의 국내 최초 타워형 태양열 발전소가 들어서게 된다. 태양열 발전설비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장소는 대구 및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물색 중이다. 세계적으로 태양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은 태양광(판) 발전에 주로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10MW이상 규모에서는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태양광에 비해 태양열 발전이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수년간 태양열 발전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 이에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미국 등에서는 10MW급 이상 상용모델 설치사수가 늘고 있고, 태양에너지가 가장 풍부한 적도 부근의 중동 및 아프리카 사막지대 역시 대규모 태양열 발전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국내 태양열 발전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은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지만, 10kW급 소형 태양열 발전 시설이 아닌 200kW급 중대형 발전시설은 국내 최초로 설치된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광의 광전효과를 통해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반면, 태양열 발전은 반사경을 이용, 집열해 수백~수천 도의 고온을 얻고, 이를 각종 발전사이클의 열원으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2000년까지 매년 6.4%(EIA 추정)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2020년께는 전 세계적으로 약 2,000GW(기가 와트) 규모의 발전 용량을 태양열 발전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GW급 발전설비당 약 5조원 이상의 대규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시행자의 대상물건에 대한 재평가 의뢰시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3호 관련)

1. 질의요지

대상물건의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른 대상물건의 재평가를 즉시 의뢰해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대상물건의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른 대상물건의 재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재평가를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한 즉시 의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해야 하고(제1항), 제1항에 의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제2항)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제3항)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토지보상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대상물건의 재평가를 의뢰해야 하는데, 그 의뢰시기와 관련해 사업시행자는 재평가를 평가 한 후 1년이 경과한 즉시 의뢰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해 취득하거나 사용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재평가를 의뢰하도록 한 취지는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 시간경과에 따른 토지 등의 가격변동 개연성이 있어 재평가를 통해 대상물건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3호는 사업시행자에게 대상물건에 대한 재평가를 의뢰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지만, 재평가 의뢰 의무와 재평가 의뢰 시기는 별개의 문제로 토지보상법령에서 그 의뢰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이 규정의 의미를 확대해 평가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 즉시 재평가를 의뢰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재평가 의뢰시기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사업일정, 보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대상물건의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른 대상물건의 재평가를 의뢰해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재평가를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한 즉시 의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받을 수 있는 용지보상업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대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관련)

1.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토지매매계약 등 용지보상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 시행하려는 경우, 그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계약대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토지매매계약 등 용지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 시행하려는 경우, 그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계약대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용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토지보상법 제81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는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규정하면서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보상액의 산정, 보상협약,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81조에 의해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 안의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의 구매 등을 위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대청요구가 있는 등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계약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해 지급받은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세입, 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산업입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토지매매계약 등 용지보상업무를 산업입지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 지방계약법 제8조 제1항의 계약대행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게 되므로, 용지보상업무가 지방계약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약대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따라 대행의 경우 권한의 위임, 위탁과는 달리 행정권한이 이전되지 않고, 그 법적 권한은 행정청의 명리와 책임으로 행사하되, 권한 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한의 위임, 위탁은 권한의 이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대리 또는 대행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계약대행과 위탁은 각각의 계약 성질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지방계약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계약대행은 위탁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위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대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위탁 업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감시 범위에 두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와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대행과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계약법의 입법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체도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려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지방계약법은 산업입지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을 받는 경우 그 위탁된 업무의 수행방식을 예상해 지방계약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대행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 률

지자체 최저차기납찰제 도입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나 용역계약 데 용역계약 및 시공품질, 기술력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정한 낙찰 하한가에 가장 근접한 금액으로 입찰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저차기납찰제는 지자체가 공사나 용역, 물품을 계약할 때 입찰가격뿐 아니라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 이행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최저차기납찰제 적용 대상은 50억원 이상의 공사나 10억원 이상의 용역 및 물품 제조 계약이며 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은 추후 별도로 마련된다. 행안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기 단축과 시공품질 향상, 지방재정 집행의 경제성 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기 공공 임대주택 재건축 용적을 완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용적률과 전매율 규제가 현행 적용 기준의 120%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정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주택공사 등 사업 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사업주체가 임차인의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임대료 차등 부과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명시했다.

복지부, 지자체 교통공무원에게 단속권한 부여

내년부터 지자체의 교통 공무원들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주차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노인 입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이날 중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상시 주차 단속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지자체 교통 공무원들에게 부여돼 한층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주차장을 만들 때 일정범위 내에서 장애인용 위한 주차구역을 별도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지만, 도심지의 경우 주차난으로 일반 차량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까지 차를 세워두는 경우가 많아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저탄소 물류기업에 보조금 녹색인증제 도입

친환경적인 물류 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물류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적인 물류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 학계, 정부 등 민관 합동으로 전문가 집단이 모여 녹색물류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저탄소 배출 등 친환경적인 물류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녹색물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세금 감면 등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이는 EU, 일본 등 선진국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비, 친환경 물류활동 지원방안과 유사한 정책이다. EU는 트럭을 이용한 물류에서 탄소 발생이 적은 선박과 철도로 전환하는 '모달 시프트(modal shift)'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마르코폴로 프로그램'을, 일본도 친환경 물류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그린물류파트너십'을 수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다.

뉴타운 재개발구역 지정요건 완화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구역의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지정요건 중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와 관련된 요건도 20% 범위 내에서 완화해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각 시도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호수밀도 등의 요건을 20% 범위 내에서 완화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밖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항목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과 면적기준을 포함하도록 규정에 의무사항을 명확히 했다.

일반인도 2012년부터 행정사 시험 응시 가능

2012년부터 일반인들도 행정사(行政士)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공무원 등 일정 경력자에게 시험 없이 자격을 부여하던 행정사 제도가 51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사는 청원, 인허가 신고, 번역 등 행정기관용 서류를 작성하거나 대리로 제출하는 일 등을 하며 전국적으로 7천명에 이른다. 법 개정으로 인해 일반 또는 기술행정사는 일반인도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이 완화된다. 지금까지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는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경력 5년 이상 공무원,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일정기간 번역경력이 있는 외국어 전공자만 별도 시험 없이 신고 후 자격을 부여해 왔다.

주거용 국유지 사용료를 인하 등 활용도 제고

앞으로 정부가 소유한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거용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인하한다. 또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위한 일반경쟁 입찰시 예정 가격의 체감한도를 낮춰 지속적인 유찰에 따른 유류 국유재산 발생을 방지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에 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해서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권(私權) 설정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사권 설정이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경우 등에 한해 사권 설정이 가능토

록 그 범위를 규정했다. 건물 등의 영구시설물을 지을 경우에는 사용 종료 후 원상회복 등의 절차를 명시했다. 유류 행정재산의 범위도 ▲행정재산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게 된 재산 ▲행정재산으로 사용키로 결정했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재산 등으로 명확히 했다. 유류 행정재산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해 해당 재산에 대한 관리청은 관련 내역을 총괄청인 재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대부 입찰 시 사용료(대부료) 채감률을 3회차 입찰부터 최초예정가격의 100분의 10 금액을 매회 낮춰 최초예정가격의 100분의 20까지 조정할 수 있게 해 지속적인 유찰로 인한 유류 국유재산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토록 했다.

환경 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내년 7월부터 환경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또 환경범죄를 단속수사하는 환경감시관 제도도 본격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환경범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법에서만 규정하던 환경범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신고행위를 모든 환경부 소관 환경 관련 법률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폐수 무단방류와 같은 환경오염이나 국립공원 자연훼손 등 특별법에 명시된 행위로만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대상 행위가 일반인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부 소관 환경 관련 법률로 넓혀져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상금은 현장점검을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징역형은 100만원, 벌금형·과태료·과징금 처벌은 벌금 부과액의 10%(최고 100만원), 허가취소·조업정지·개선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은 3만~50만원이다. 개정안은 또 환경범죄의 예방·단속과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 관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환경감시관을 지정토록 하고 환경감시관의 자격이나 임명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리더추천릴레이' 코너 신설 취지

이번 호부터 국민경제육성과 지역사회발전을 주도해 온 유능한 리더를 대상으로 가치관과 경영철학을 소개하는 '리더추천릴레이' 코너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코너는 고객감동 경영혁신을 실천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리더를 선정하여 칭찬과 격려를 통해 리더십 향상과 동기 부여를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앞으로 소개된 리더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경영저널 주축하는 '올해의 최고 리더상'도 함께 시상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격물치지' 를 일깨워준 리더

대경리더십아카데미 김월화 원장



▶대경리더십아카데미 김월화 원장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구원 생활한지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현장 중심의 연구사업 수행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미래지향적인 인간중심의 유비쿼터스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우리연구원은 환경, 폐기물 및 공공요금(교통? 상하수도 등) 연구분야에서 첨단 연구기법과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전국 최고 연구원으로 인정받아 '엘리트 이코노미스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몸담고 있는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원가계산검토, 경영진단, 기본계획수립 등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비영리법인이다.

볼록의 나이를 지나면서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기 시작할 때 대경리더십아카데미 김월화 원장님을 만났다. 그분과의 인연은 5년 전 수성구청 '사회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다. 패널로 참석한 김월화 원장님은 탁월한 업무능력과 통찰력 그리고 리더십이 돋보였다. 그분은 필자가 어릴 때 TV에서 본 독특한 어법으로 말씀하시던 KBS 기자출신이었고, 퇴직 후 대구경북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대경리더십아카데미 강좌'를 열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필자도 평소 리더십 역할과 역량강화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신문화의 수도 대구경북에도 리더를 위한 재교육과 계층 간의 문화교류 및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다.

이같은 인연으로 대경리더십아카데미 강좌를 수강하게 되었다. 매주 화요일마다 저명한 인사들이 초빙되어 리더십과 역량강화라는 주제로 열띤 강의가 이어졌다. 이를 통해 필자는 리더가 가져야할 덕목과 자세를 재성찰하게 되었고, 다양한 계층에서 대인관계를 접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분과의 인연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었고, 특히 '격물치지'를 일깨워준 신고마운 분으로 기억된다. 격물치지만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있으며, 사물의 옳고 그름을 내 마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지식을 올바르게 완전하게 함을 의미한다. 돌이켜보면 그분은 또 다른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해 준 리더였다. 올바른 지도자교육으로 경쟁력 있는 차세대리더를 양성하겠다고 배움의 장을 연 김월화 원장님. 다시 한번 '격물치지'를 일깨워준 원장님을 감히 칭찬하며, 깊이 고개 숙여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

한국경제기획연구원
이진구 이사장



▶한국경제기획연구원 이진구 이사장

고객감동의 가치추구,
에코가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자산관리컨설팅

▶부동산, 주식, 금융, M&A 투자컨설팅

학술연구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경영평가

교육컨설팅

▶리더십, 역량개발, 기타 교육컨설팅

리서치

▶여론조사, 시장조사, 만족도 조사

